

KRIHS 세미나 중계 10-㉓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전략과 한국의 역할

박재길(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 개발도상국의 지역·도시개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 국토연구원은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시 신규 의제로 설정된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30일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센터)를 연구원 내 조직으로 신설
 - GDP센터 설치 후의 활동 방향과 관련하여 세계은행(The World Bank)과 MOU를 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전략을 지원하는 국제 워크숍을 12월 13일(월)부터 14일(화)까지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
-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역할 수행 필요성
 - 유엔(UN)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현재는 세계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49%이지만 앞으로 2030년에는 60%로 될 것이며, 증가 인구의 93%는 바로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구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은 여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이 경제성장과 도시화 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사회를 발전시켜 온 점에 주목하여, 세계은행 주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도시화 사례 연구(Pilot Urbanization Review)’ 사업 추진에 국토연구원의 협력을 요청함
- 워크숍에 참석한 사례연구 국가(중국, 인도, 베트남, 콜롬비아)는 각 나라별의 도시화 상황과 현재 직면하는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
 - 이를 통하여 한국 및 세계은행이 앞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사항도 같이 논의

- 중국 및 베트남은 도시화 과정에서의 토지 전용 등 토지 제도와 기초적 생활기반 시설 격차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그 해결에 부심하고 있음
 - 인도는 경제성장 지역과 도시성장 지역의 불일치로 도시빈민 문제 해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콜롬비아는 비교적 높은 도시화율에 달하면서 슬럼지역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 직면
 - 앞으로 우리나라도 서울 G20 주요 의제 실천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의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전략을 적극 지원함이 바람직

I. 세계은행(World Bank):개발도상국 도시화 전략의 체계화

● 세계은행과 개발도상국 도시화 전략

- 세계은행(The World Bank: WB)은 1944년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음
 - 최근 개도국의 도시화 문제를 핵심 이슈의 하나로 다루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도시화 전략”으로 접근
 - 산하 도시개발본부(Urban Development Unit) 주도로 개도국 도시화에 대한 진단모형과 새로운 도시화 전략을 제시
- 도시개발본부는 아시아, 중남미 등의 각 지역본부와 협조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등 5개국에 대한 「도시화 사례연구(Pilot Urbanization Review)」를 수행
 - 「2009 World Bank Report: Reshaping Economic Geography」, 「Systems of Cities」(2009)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도시화에 대한 분석틀 정립
 - 향후 세계은행은 사례연구 확대, 지역 프로젝트 발굴, 심포지엄 개최 등 글로벌 연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http://www.wburbanstrategy.org/urbanstrategy>)

●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관계 재설정

- 도시화를 보는 긍정적 관점 강조
 - 한국 등을 20세기 후반 도시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로 간주하여 “급격한 도시화가 빈곤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부정적 인식 대신에 “도시화 정책을 통해 성장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의 필요성 강조
 - 특히 향후 20년간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에서 폭발적인 도시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 해결의 현실성 있는 도시정책을 모색
- 도시화 단계별로 요구되는 과제 해결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도시화가 초기, 중기, 성숙기로 되면서 밀도(density), 거리(distance), 분화(division) 순으로 과제가 누적됨
 - 초기는 경제활동 집적을 위한 토지의 원활한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유연한 제도(institution)와 기초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균형적 확보가 중요

- 중기에는 과밀에 대한 도시성장과 집적효과의 주변 확산을 위한 인프라 연결(connective infrastructure) 및 확보가 중요
- 성숙기에는 도시 및 경제 성장 과정에서 뒤쳐진



	제도	인프라 (공공 및 민간부문)	조정과 개입 (정책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 교정)
초기		민간부문 시장기능 작동,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중기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교통, 통신 등 고정자본형 인프라)	
성숙기			효과적인 조정, 개입과 적절한 보상

슬럼지역 등과 계층에 대한 정책적 개입(targeted interventions)과 처방이 중요

- 장기적으로는 “도시전략·지방정부전략(Urban and Local Government Strategy)”으로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복합적이고 적극적인 전략 추진에 세계은행의 역할을 모색(Systems of Cities, 2009)
 - 도시관리, 재정, 거버넌스 등 도시시스템의 핵심요소에 집중
 - 슬럼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 빈곤문제 해결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 도시경제 활성화 지원
 - 보다 유연하고 선진적인 토지 및 주택시장 형성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WB-KRIHS MOU 체결과 향후 협력방안

“한국은 선도적 입장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도시화 전략 개발을 지원해야”

- ▶ WB와 국토연구원은 상호 협력과 공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2010.12.13)
- ▶ 여기에는 도시화 및 도시정책 관련 지식의 공유와 교환, 제3국에 대한 기술 및 학술 지원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 연구인력 교류·교환 등의 협력 방안과 실행 방식을 천명
- ▶ WB-KRIHS MOU 후속 실행 프로그램에 관한 간담회(2010.12.13, 최성수 WB 수석전문위원 참석) 개최
- ▶ 개도국 도시화에 관한 현지 공동연구, 인도·방글라데시 도시개발 전략, Mega City Management 연구(델리, 뭄바이 등), WB의 도시화연구(Urbanization Review)를 가나, 모로코 등 아프리카로 확대하는 일 등 공동 연구 방안 논의



II. 중국: 농업용지의 개발용지 전용에 관한 논의

쉬 난(선임 설계사 서기 겸 중국 도시계획 리뷰 편집국장), 류 평(중국 국무위원회 본부장)

● 국가적 배경

- 2009년 현재 인구는 13억 3,861만 명이며, 면적은 960만km²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큼
- 2008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3,259달러 (2008)이며, 1980년대 초에 사회적·정치적으로는 개방을 제한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면서 매년 9~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룩

[그림 1] 중국 위치도



● 도시화 진전상황과 문제점

- 1980년대 초 18%에 불과하던 도시화율이 30년 만인 2009년 현재 47%에 달함
 -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
 - 중국 정부는 도시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히 농업용지 전용 문제를 고심해 왔음
- 도시와 농촌의 격차 심화
 - 1978년 농촌 대비 1.86배였던 도시 소득수준이 2007년에 3.33배로 격차가 확대
 - 1980년대에 정부는 농촌 소재 기업들이 농촌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토지이용과 생산 측면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농촌지역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도시화를 농촌의 소득증대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는 인구재배치 정책을 강구해 옴
 - 농촌 거주자를 감소시켜 농촌가구의 평균소득 증가를 유도함과 동시에 농촌 이주자들이 도시에서 직업을 갖는 기회가 많게 되어 고향으로 더 많은 돈을 보내게 됨
 - 도심에서 농촌잉여인구 고용을 장려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 **준도시화된 농촌 이주자와 농업용지 전용 문제의 해결이 중요과제로 대두**

- 도시인구의 구성은 대략 도시의 상주 인구가 53%, 6개월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가 24%, 기타 농촌에서 도시로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23%를 차지
- 토지문제는 이들 농촌 이주자들이 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장애가 되어 옴
→ 농촌지역 토지는 농업용지든, 건설용지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됨
→ 상업용지로의 개발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 땅에서만 가능하고, 농업용지는 도시용 지로 전용이 불가능
→ 토지가치가 시장에서 현실화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도시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자유로운 이주가 제약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와 농업용지 전용 정책의 개선을 검토
 - ① 토지전용에 대한 행정 등을 개선(2001년 5월, 10차 중국도시화 5개년 계획)
 - ② 현재의 토지수용체계를 개편하여 건설용지로의 농촌토지 전용 허용을 모색
 - ③ 건설용도로서의 농촌토지 사용권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을 연구(2005년 국무위원회의 경제개혁촉진령)
 - ④ 토지전용을 위한 단일시장 구축을 모색

전문가 인터뷰 ■ Liu Feng

“연구기관 간의 교환연구원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한국의 도시화 과정으로부터 배울 만한 요소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저는 정부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공공에 의한 대규모 주택개발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공급했다는 점과 국토해양부와 같은 정부기관이 도시개발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나갔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중국에서도 현재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며, 토지 혹은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정부기구가 없어서 내년에 이를 만들고자 진행 중입니다.

▶ 한국과의 협력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국토연구원, 국가계획기구와 같은 연구기관 간의 교환연구원(Exchange Scholars)제도를 두어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년에는 중국에도 국토해양부와 비슷한 기관을 만들 예정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부족하므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 류 펑(Liu Feng) - 중국 국무위원회 본부장.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를 상대로 지역경제와 공공정책에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음. 칭화대학교에서 연구업무를 역임하였음.

III. 인도: 경제성장 속도에 뒤떨어진 도시화 정책 과제

음 프라카쉬 마투르(인도 국립 공공금융 및 정책연구소 교수)

● 국가적 배경

- 2010년 현재의 인도 인구는 11억 7,311만 명으로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면적은 329만km²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넓음
-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은 3조 8,620억 달러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은 3,200달러임
 -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중은 농업 17.1%, 광공업 28.2%, 서비스업 54.6%로 2차산업의 비중이 낮고 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2%임

[그림 2] 인도 위치도



- 인도는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약 6.5%의 GDP 증가율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빈부격차 지수(지니계수)는 36.8%에 이르고,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33%를 차지

● 도시화 진전 상황과 문제점

- 지난 20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로 인하여 도시부문이 농업부문보다 5배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음
 - 도시지역의 소득향상은 농촌지역의 빈곤해결에도 도움이 되는데, 도시지역의 소득증가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와 농촌지역의 고용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인도의 도시화 진행속도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림
 - 1980년과 2001년 사이의 20년 동안 도시지역의 인구비중은 24%에서 28%로 증가하는데 그침(동 기간에 중국은 도시인구가 19%에서 37%로 약 2배 증가)
- 미진한 도시화 현상과 함께 지역 간 도시화율의 격차가 아주 크다는 점이 두드러짐
 - 지역 및 도시별로 다양한 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처방과 투자 등이 필요함

-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문 역시 도시보다는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인도의 도시화는 인구 10만에서 100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산업 입지는 오히려 이보다 인구규모가 작은 도시나 농촌지역에서 활발
 -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입지 조건이 기업활동에 비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 도시가 경제성장 및 빈곤 해소의 주된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서는 도시 내 인프라와 서비스 부족, 토지와 주택시장 미발달 등이 지적되고 있음
 - 10차 국가5개년 계획부터는 도시발달 지체를 성장의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개혁 추진을 명시
 - 최근에는 도시 발전을 위한 어젠다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세계은행(The World Bank)과 같이 도시인프라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등의 논의를 진행

전문가 인터뷰 ■ Om Prakash Marthur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한국의 도시화 경험이 인도에 주는 교훈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 한국에서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도시화 또한 빠른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인력의 공급처로서, 또 급속한 산업화를 위한 산업입지의 공급처로서 도시가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산업화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증가하는 도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 등은 인도의 도시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팽창이나 도시지역의 확장에 대응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경험이나 도시계획 제도 마련 등은 인도 도시화 과정에도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 인도와 한국의 협력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 최근 인도에서는 도시문제의 처방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도시화를 경험한 한국 도시들의 사례는 인도 도시가 처한 과제들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규모나 특성의 도시 간 협력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토연구원과 같이 도시화와 산업화에 관한 많은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인도정부와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수립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옴 프라카쉬 마투르(Om Prakash Marthur)** _ 인도 국립 공공금융 및 정책연구소 교수, 인도의 도시문제와 관련된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인도 정부의 개발 위원회를 필두로 도시 인프라 위원회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1975년부터 1984년까지 국제연합 지역개발 고문으로 활동하였음.

IV. 베트남: 도시화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이슈

트란 김 충(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원 투자정책실장)

● 국가적 배경

- 2009년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8,957만 명이며, 국토면적은 33만km²로 한반도의 1.5배에 해당
-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은 2,565.8억 달러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은 2,942달러(2010년)
 -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중은 농업 21.3%, 광공업 40.0%, 서비스업 38.7%로 2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음
- 경제개발 전략은 1986년부터 사회주의 개방·개혁 정책인 ‘도이모이(Doi Moi)’를 시행하여 경제기반을 구축
 - 경제개발은 산업지구(industrial zone)와 경제지구(economic zone)를 중심으로 추진

[그림 3] 베트남 위치도



● 도시화 진전 상황과 문제점

- 베트남의 도시인구는 2009년 현재 2,550만 명으로 도시화율은 29.6%이며, 연평균 증가율이 3.86%에 달하고 있어 도시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임
-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서 핵심 도전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의 극복을 위해 도시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
 - 비농업지역의 도시개발을 통해 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회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농촌개발과 도시개발을 긴밀히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모색
- 도시지역은 베트남 국내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최상위 5개 도시가 36%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이 도시지역에 집중
 - 도시 내부에서는 기존의 도시지역과 새롭게 도시화되는 지역 간에 인프라 수준 등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도시공간구조의 비효율이 증대

- 베트남의 도시지역은 기초서비스 공급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양적으로 부족하며,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낮음
 - 상수도 보급률의 경우 1993년 26%에서 2002년 49%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대도시(76%)와 농촌(11%) 간에 큰 격차를 노정
- 도시개발은 토지법(2003년)에 의해 시행되며, 도시정책의 주요 이슈는 토지이용정책, 국가도시화 전략, 도시개발관리 행정의 분권화 등을 들 수 있음
 - 토지이용 정책의 경우,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국민은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가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서 비롯
 - 도시체계 발전 마스터플랜(2009년)에서 산업화·현대화에 적합한 도시체계 구축, 도시·농촌 연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시인프라 구축 등의 개념이 제시됨
 - 도시개발관리 행정의 분권화를 위해 사회경제개발계획, 건설계획, 부문별 계획의 승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투자결정 및 재원 동원, 토지관리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전문가 인터뷰 3 Tran Kim Chung

“한국의 앞선 경험을 베트남의 국토 및 도시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한국의 도시화 경험이 베트남에 주는 교훈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 베트남과 한국은 유교문화권으로서 근면하고 교육열 높은 국민,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 등 공통점을 갖고 있어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부상하였고,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도 도시문제를 잘 해결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험은 베트남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해결에 훌륭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 ▶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 베트남의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한국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 지역의 신도시 개발도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도로 및 항만 구축, 낙후 산악지역 및 농촌지역 투자, 산업단지 개발, 민관협력을 통한 토지개발 등에서 한국의 지원과 경험이 유익할 것입니다.



※ 트란 김 충(Tran Kim Chung)_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원(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의 투자정책실장. 15년간 국제연합 및 세계은행에서 근무함. 주로 지역 경제와 공공정책을 분석하며, 현재 베트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개발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음.

V. 콜롬비아의 도시체계: 도전과 기회

후안 모리시오 라미레즈(콜롬비아 국토기획원 부국장)

● 국가적 배경

- 2010년 현재의 콜롬비아 인구는 4,551만 명으로 남한의 91% 수준이고, 국토면적은 11.4배인 114만km²임

- 남미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다음으로 면적이 큰 국가임

- 구매력 기준의 국내총생산은 2010년을 기준으로 4,020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은 8,936달러임

- 과거 미국에 들어오는 코카인의 80%가 콜롬비아에서 밀수출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마약밀매 등 지하경제가 번성하였으나 최근 급격히 개선되고 있음

- 치안 개선, 경제개혁과 민간투자 확대, 낮아지는 인플레이션으로 2000년대에는 경제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음

[그림 4] 콜롬비아 위치도



● 도시화 진전 상황과 문제점

- 현재 남미에서 가장 도시화된 국가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음

- 1951년의 도시화율은 38.9%에 불과하였으나, 1973년 59.3%, 1993년 68.7%, 2010년 75.6%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77.1%로 예측
- 2010년~2020년까지 도시지역에서 약 600만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됨
- 수도 보고타에 인구의 16.3%인 741만 2천 명, 대도시권에 21.1%인 960만 명이 거주
- 2010년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4개, 10만 명 이상 도시는 41개

-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

- 소득 최상위 20%가 소득/소비의 62.7%, 최하위 20%는 단지 2.5%를 점유할 정도로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며 전체인구의 47%가 빈곤층임(2007년)

- 수도권 보고타와 다른 대도시, 도시 내 구역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
- 높은 범죄 발생률과 함께 2009년 현재 12%의 고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

- 인구 50만 명 이상의 세계 800개 도시 중 세계 50대 고밀도시 안에 보고타(16위), 이바게(20위), 메딜린(31위), 부카라마가(50위) 등 4개 도시가 포함될 정도로 도시 인구 밀도가 크게 높음
-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택지부족과 함께 높은 토지가격을 형성
-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된 주요 교통축에 통행량이 집중되면서 도시 내 교통뿐만 아니라 보고타 - 부에나벤투라, 보고타 - 카르타헤나 등 주요 도시 간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교통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
- 도시화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심화되고, 슬럼지역과 재난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증가

전문가 인터뷰 4 Juan Mauricio Ramirez

“한국과 첨단교통, 도시부문의 구체적인 협력을 희망합니다”

- ▶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개발정책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 ▶ 한국은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높은 소득과 생산성, 사회적 번영을 실현할 국토개발계획을 근거로 도시개발계획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 ▶ 어떤 분야에서 한국 및 국토연구원과 협력하기를 원합니까?
- ▶ ▶ 기후변화와 재난예방, 인프라개발에 대한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의 기술적·재정적 실행방안, 서민주택지원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건설기술관리, 도시개발 경험공유 등 다양합니다. 콜롬비아의 국토기획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간 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전문가 교환, 도시연구, 시범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을 기대합니다.



※ 후안 모리시오 라미레스(Juan Mauricio Ramirez) _ 콜롬비아 국토기획원(National Planning Department) 부국장.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및 거시경제 분석 책임자, 재무부 거시경제정책 책임자를 역임.

VI. 한국의 기대되는 역할과 협력방안

● 개도국 도시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기대되는 역할

- 개발도상국이 추구할 모델로 한국의 도시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의 경우 도시화를 산업화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해 온 결과, 교외지역 스프롤(sprawl) 등의 문제에 부심하게 됨
 - 한국의 도시화정책은 경제성장 지원과 도시형성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옴
- G20 주요 의제인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도시화전략 지원이 필요
 - ‘개발의제’ 제안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 개발도상국 지원 및 ‘개발의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의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의 보다 긴밀한 유대 형성이 중요

● 개발도상국 지원 및 협력 추진 방안

-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지원 강화
 -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 간의 MOU 체결을 계기로 개도국 도시화 전략 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
 -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도국에 대한 현지 지원을 늘리고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학습 기회를 확대
- 한국 경험의 체계적 정리와 GDP센터를 통한 개도국 관계자 교육 확대
 - 도시화 초기의 1960년 이전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도시화 과정 및 도시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
 -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상황과 사회배경 및 제도를 포함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 추진

국토연구원 공동집필진

-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 박재길 선임연구위원(jgpark@krihs.re.kr, 031-380-0398)
-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김태환 선임연구위원(jgpark@krihs.re.kr, 031-380-0201)
-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이원섭 선임연구위원(wslee@krihs.re.kr, 031-380-0156)
-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 이왕건 연구위원(wglee@krihs.re.kr, 031-380-0242)
-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문정호 연구위원(jhmoon@krihs.re.kr, 031-380-0216)
-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 김은란 책임연구위원(erkim@krihs.re.kr, 031-380-0668)